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배치형태와 혁신적 AI 활용 : 경기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Perceived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Norms, Assignment Type, and Innovative AI Use

: A Study of Policy Support Officers in Local Councils in Gyeonggi Province

홍 상 우*·김 성 근**·김 민 한***

Hong, SangWoo·Kim, SungGeun·Kim, Minhan

■ 목 차 ■

- I. 서론
- II. 제도 및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 결과
- V. 결론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공무원의 AI 수용과 업무활용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므로 업무배분, 지휘체계 및 결과물 검토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지각한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 관계가 배치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2026년 1월 경기도 내 18개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정책지원관 155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위계적 조절회귀분석과 HC3 강건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배치형태를 투입하기 전 모형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배치형태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 제1저자,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객원교수

** 공동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26. 8. 12. 심사기간: 2026. 8. 12. ~ 2026. 9. 21. 게재확정일: 2026. 9. 21.

으며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셋째, 의원 공동배치에서는 증거 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사무처 부서 소속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회 단위 군집표준오차와 의회 고정효과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집단 간 기울기 차이는 유지되었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각각 사용한 두 모형에서는 상호작용계수의 방향과 크기가 유사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가 배치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주제어: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혁신적 AI 활용, 정책지원관, 배치형태, 지방의회

The diffusion of generative AI has increased scholarly interest in public officials' acceptance and use of AI at work. Policy support officers in local councils, however, work under distinctive task-allocation, supervisory, and review arrangements while directly assisting council members.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policy support officers' perceptions of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norms in their councils and innovative AI use and tests whether this association varies by assignment type. Innovative AI use encompasses interest in new ways of using AI, exploration of new functions, adjustment and experimentation with usage methods and settings, and application of these practices to work. Survey data were collected in January 2026 from 155 policy support officers working in 18 provincial and municipal councils in Gyeonggi Province.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with education treated categorically and HC3 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s. In the model before assignment type was added,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norms and innovative AI us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 = .186, p = .226$). The interaction between perceived norms and assignment ty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 = -.643, p = .017$) and increased the explained variance by 4.6 percentage points. A significant positive conditional association was found among officers jointly assigned to council members ($B = .449, p = .011$), where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among officers assigned to council secretariat departments ($B = -.194, p = .365$). The difference in slopes was maintained in models using council-clustered standard errors and council fixed effects. Models using positively and negatively worded items separately produced interaction coefficients with similar directions and magnitudes, although their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norms and innovative AI use may be conditional

on assignment type.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discretion, task diversity, and supervisory and review procedures to clarify why the association differs by assignment type.

□ Keywords: Perceived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Norms, Innovative AI Use, Policy Support Officer, Assignment Type, Local Council

I. 서론

AI는 공공부문의 정보처리와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Wirtz et al., 2019; Zuiderwijk et al., 2021).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공무원의 AI 업무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무원의 생성형 AI 이용의도, 활용경험, 업무도입 행동의도, 기술수용 태도, 활용 수준 및 개인성격을 분석한 연구가 증가하였다(노상규·오연재, 2025; 박순애·이혜연, 2025; 정혜진, 2025; 최혜민·안용진, 2025; 홍상우, 2026a, 2026b). 다만 기존 연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공무원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조사·연구, 조례안 검토,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 현안 분석을 지원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출처의 자료를 탐색·비교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AI의 정보처리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AI 산출물의 정확성, 출처, 보안 및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인된 AI 수용요인이 정책지원관의 직무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관 관련 연구는 제도의 법적 쟁점, 직무범위, 배치와 지휘체계, 인사관리, 역할과 역량 및 입법성과를 주로 다루어 왔다(송현호 외, 2023; 박진우·박상우, 2024; 홍상우 외, 2025). 다만 이러한 연구는 제도의 운영과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주로 다루었으며 AI 도입 이후의 활용행태와 이에 관련된 조직규범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별로 배치부서, 업무지시 주체 및 결과물 검토방식이 다르므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AI 활용 간 관계를 분석할 때 배치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이 지각한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과 혁신적 AI 활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은 소속 의회가 검증된 결과, 성과정보, 평가자료 및 학술연구를 중시한다고 정책지원관이 지각하는 정도를 뜻한다(Hall & Van Ryzin, 2019). 혁신적 AI 활용은 AI 도구의 새로운 활용방식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기능 및 사용방법을 탐색·조정·실험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Li et al., 2013; Wang et al., 2022, 2023).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두 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지원관이 지각한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은 혁신적 AI 활용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둘째, 이 관계는 의원 공동배치와 사무처 부서 소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혁신적 AI 활용과 관련된 조직규범을 검토하고 배치형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6년 1월 경기도 내 18개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정책지원관 155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AI 업무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도 및 이론적 논의

1. 정책지원관 제도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복잡해지고 집행기관의 조직·인력·정보가 확대되면서 제한된 임기와 지원체계 안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기존 사무기구와 전문위원만으로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정책보좌인력 도입이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되었다(문원식, 2014; 박순중·박노수, 2014; 류춘호, 2017).

정책지원관 제도의 법적 근거는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마련되었다. 제41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는 그 명칭과 직무를 정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조례안,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적 보좌인력과 구분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식적인 지휘·감독체계가 요구된다(전지수, 2023).

정책지원관 관련 선행연구는 제도설계와 법적 직무, 배치·운영, 조직행태와 제도효과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설계와 법적 직무 연구는 정책보좌인력의 필요성, 법적 허용가능성, 정수와 신분, 직무범위 및 정치적 중립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문원식, 2014; 박순중·박노수, 2014; 류춘호, 2017; 박순중, 2021; 전지수, 2023). 다만 해당 선행연구들에서는 제도의 도입 근거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였으나 정책지원관 개인의 업무행태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배치·운영 연구는 지방의회별로 배치부서, 지원대상, 업무지시 주체, 업무조정 및 인사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병현, 2023; 손경희, 2023; 주희진, 2023; 주희진 외, 2023; 유병선, 2023; 윤정우·하병규, 2024; 전영옥, 2024; 박진우·박상우, 2024). 이들 연구는 배치형태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재량과 지휘·검토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배치형태에 따라 소속 의회의 의사결정 규범과 정책지원관의 기술활용 간 관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행태와 제도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역할, 조직공정성, 직무만족, 조직신뢰, 조직몰입, 제도 만족도, 입법성과 및 직무역량을 분석하였다(송현호 외, 2023; 홍상우·오현규, 2023; 홍상우 외, 2023, 2025; 김용석·김태영, 2023; 김경일·김정도, 2025; 이원재, 2026; 안성현 외, 2025; 박순중 외, 2025; 김영준, 2026). AI 관련 연구로는 이재란·신연수(2025)

가 AI 기반 의정데이터 분석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정책지원관 개인의 AI 활용행태와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간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배치형태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정책지원관의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를 분석한다.

〈표 1〉 정책지원관 제도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주요 연구	대상 및 방법	주요 내용
도입·제도 설계	문원식(2014); 박순중·박노수(2014); 류춘호(2017); 박순중(2021)	문헌·법제·사례 분석	도입 필요성, 법적 쟁점, 재정부담, 개인정보와 우려 및 의회별 여건을 반영한 제도설계 검토
법적 직무	전지수(2023)	법해석 및 입법론적 분석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제시
인사·운영	이병현(2023); 손경희(2023)	법제 분석 및 중요도-만족도 조사	배치, 업무구분, 선발, 평가, 교육훈련 및 별도 조직의 개선과제 제시
운영 쟁점	주희진(2023)	법령·조례 및 광역의회 운영현황 검토	직무범위, 업무 중복, 배치·업무지시 및 임용요건을 분석하고 의회별 운영과 채용·교육체계 개선 제안
자치 조직권	주희진·고경훈·정기용(2023)	법·제도 분석 및 지방의회 관계자 조사	지역별 편차, 인력 확보 및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간 갈등을 자치조직권의 운영적 제약으로 분석
배치·운영 실태	유병선(2023); 윤정우·하병규(2024); 전영옥(2024); 박진우·박상우(2024)	사례·인터뷰·행정자료·자치법규 분석	직무범위와 위원회형·사무처형·혼합형 배치 및 업무지시·조정체계의 차이 확인
역할·조직 행태	송현호·김경화·김민한(2023); 홍상우·오현규(2023); 홍상우·김동욱·이대웅(2023); 홍상우·김동욱·이대웅(2025)	델파이·AHP·설문·회귀분석·의미망분석·인터뷰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조직공정성·직무만족·조직신뢰·조직몰입의 관계 및 구조적 문제 분석
제도 효과·역량	김용석·김태영(2023); 김경일·김정도(2025); 이원재(2026); 안성현·이선은·이치현(2025); 박순중·강상원·이승모(2025); 김영준(2026)	설문·의정자료·패널 분석·AHP·교육요구 분석	제도 만족도, 입법성과, 주요 직무와 교육·직무역량 개발 필요성 검토
AI 의정 지원	이재란·신연수(2025)	행정법적·제도적 검토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의정데이터 분석 및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제안

2. 혁신적 AI 활용

혁신적 AI 활용은 이미 채택한 AI 도구의 새로운 활용방식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기능 및 사용방법을 탐색·조정·실험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정보시스템의 사후수용 연구에 근거한다. Ahuja and Thatcher(2005)는 정보기술 채택 이후 이용자가 새로운 용도를 찾고 실제로 시도하는 행동을 ‘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 시도’로 설명하였다. Li et al.(2013)은 사후수용 단계의 정보시스템 사용을 일상적 사용과 혁신적 사용으로 구분하고 혁신적 사용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방법을 발견하여 적용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일상적 사용은 익숙한 기능을 정형화된 방식으로 반복하는 행동이며 혁신적 사용은 기존 사용 관행과 다른 기능이나 방법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행동이다(Li et al., 2013). 이때 혁신성은 이용자 자신의 기존 사용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이용자도 반복과업에서는 일상적 사용을 하고 새로운 과업에서는 혁신적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두 사용방식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혁신적 사용 개념은 AI의 업무활용 연구에도 적용되어 왔다. Wang et al.(2022)은 챗봇의 일상적 사용과 혁신적 사용을 구분하였으며 Wang et al.(2023)은 챗봇에 대한 신뢰와 혁신적 사용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주영·최경현(2024)이 생성형 AI 사용을 일상적 사용과 혁신적 사용으로 구분하여 조직문화와의 관계를 검토한 바 있다. Zhang et al.(2026)은 AI 지식 임파워먼트와 AI의 혁신적 사용 간 관계가 업무 및 기술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혁신적 AI 활용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탐색적 사용, 적응적 시스템 사용 및 혁신행동이 있다. 탐색적 사용은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이나 활용방법을 찾아 시도하는 행동을 의미하며(Koo et al., 2015), 적응적 시스템 사용은 업무특성에 따라 사용할 기능과 사용방식을 조정하는 행동을 말한다(Sun, 2012).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제안·실행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직무 행동을 의미한다(Janssen, 2000). 본 연구는 AI 도구의 새로운 활용방식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기능 및 사용방법의 탐색·조정·실험, 업무 적용을 중심으로 혁신적 AI 활용을 분석한다.

3.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증거기반 의사결정은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판단을 내릴 때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통계자료, 성과정보, 사업평가 및 학술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접근을 의미한다(Jennings & Hall, 2012; Head, 2016). 이는 정책가치, 법·제도적 조건, 이해관계 및 실무자의 전문적 판단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결과를 정책대안의 선택과 사업의 수정·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정보처리 관점에서 조직구성원은 업무환경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단서를 통하여 어떠한 정보와 행동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Salancik & Pfeffer, 1978). 정책지원관이 소속 의회가 검증된 결과와 정기적 평가를 중시한다고 지각하면 자료의 출처, 정책효과 및 검증 가능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업무상 요구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조직정보처리 관점에서는 과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조직의 정보처리능력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한다(Tushman & Nadler, 1978). AI는 대량의 자료를 분류·요약하고 자료 간 차이와 패턴을 탐색하는 정보처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Wirtz et al., 2019). 소속 의회가 증거를 중시한다고 인식하는 정책지원관은 정책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분석결과를 비교·확인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I의 검색방법, 지시문, 기능 및 설정값을 조정하고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수용모형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와 사용을 설명한다고 본다(Davis, 1989). 증거탐색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AI의 정보처리 기능이 과업에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증거 검토의 필요성과 AI의 업무활용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보완적 근거로 활용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AI 채택 이후의 혁신적 활용이다. 사후수용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는 과업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사용하는 기술에서 새로운 기능과 용도를 찾고 사용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Ahuja & Thatcher, 2005; Li et al., 2013).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소속 의회가 증거를 중시한다고 인식하는 정책지원관은 자료를 탐색하고 검토하기 위해 AI의 새로운 기능과 사용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H1. 정책지원관이 지각한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은 혁신적 AI 활용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4.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와 조절효과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는 지방의회 내 소속과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업무배분과 결과물 검토방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회사무기구에 두도록 규정하지만 위원회별 배치, 별도 부서 배치, 의원 공동배치, 업무지시 주체 및 업무 조정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에 실제 배치와 운영은 각 지방의회의 조례·규칙 및 운영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2024)의 위원회형·사무처형·혼합형과 전지수(2023)의 의장형·의원형·위원회형·사무기구형·혼합형은 지방의회 전체의 조직구조나 법규상 지휘체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 개인이 응답한 소속과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배치형태를 구분하므로 지방의회 전체의 운영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와 분석단위가 다르다. 이에 의원 공동배치와 사무처 부서 소속을 구분하여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지원대상에 따른 차이를 개인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지방의회별로 정책지원관의 배치부서, 지원대상, 업무지시 주체, 업무조정 및 결과물 검토방식이 다르게 운영됨을 확인하였다(이병현, 2023; 주희진, 2023; 윤정우·하병규, 2024; 박진우·박상우, 2024). 의원 공동배치에서는 정책지원관이 정해진 복수 의원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여러 요청의 우선순위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사무처 부서 소속에서는 부서의 업무분장과 관리자의 조정에 따라 과업을 배분받고 부서의 보고·검토 절차에 따라 결과물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치형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배분과 결과물 검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직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정보기술의 사후수용 단계에서 새로운 기능을 탐색하고 사용방법을 바꾸는 행태는 이용자가 경험하는 업무재량과 조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huja & Thatcher, 2005).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에 대한 인식이 유사하더라도 의원의 요구를 직접 파악하는 정도, 과업의 다양성, 업무상 재량 및 결과물 검토방식에 따라 혁신적 AI 활용과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의원 공동배치에서는 복수 의원의 관심 분야와 자료요구가 서로 다르고 과업의 형식과 일정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정책지원관이 소속 의회에서 증거를 중시한다고 인식하면 자료의 정확성과 검증가능성을 기준으로 자료와 분석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원별 요청에 적합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I의 새로운 기능, 검색방법 및 지시문을 시험하고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원의 요구에 직접 대응하는 의원 공동배치에서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정(+)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 부서 소속에서는 업무배분과 우선순위 조정, 결과물 검토가 부서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료의 근거와 정확성에 관한 요구도 부서의 보고방식과 검토기준에 따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AI 기능과 사용방법의 적용이 부서의 승인과 조정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인식하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가 의원 공동배치에 비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배치형태에 따라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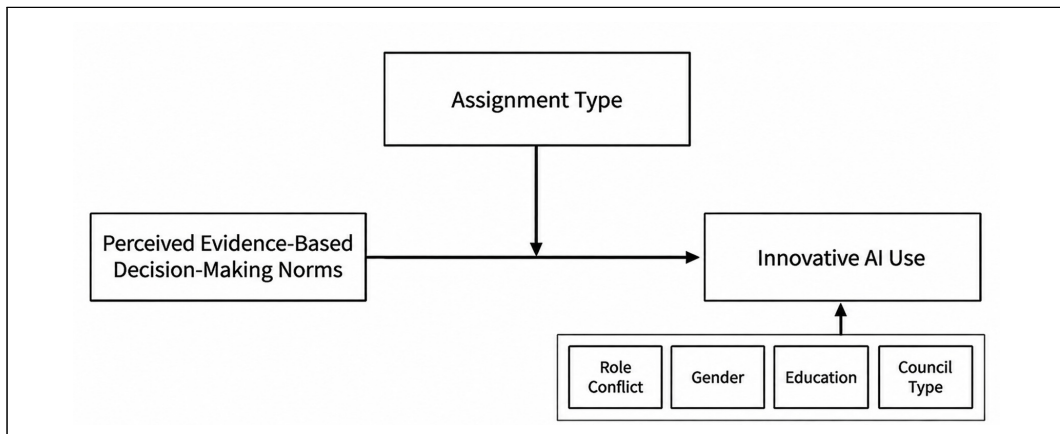
가설 H2.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정책지원관의 혁신적 AI 활용 간 정(+)의 관계는 사무처 부서 소속에 비해 의원 공동배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이 지각한 소속 지방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 관계가 배치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을 독립변수, 혁신적 AI 활용을 종속변수, 배치형태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 학력, 의회유형 및 역할갈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가설 H1은 두 변수 간 정(+)의 관계를 예상하며 가설 H2는 이 관계의 기울기가 사무처 부서 소속보다 의원 공동배치에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먼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문항의 구조를 검토하기 위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6문항, 혁신적 AI 활용 5문항 및 역할갈등 7문항 등 총 18문항을 동시에 투입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부정문항 3개는 분석 전에 역채점하였다. 주성분 추출과 Direct Oblimin 회전($\delta = 0$, Kaiser 정규화)을 적용하였으며 성분 수는 사전에 고정하지 않았다. 성분 수는 초기 고유값 1 이상 기준과 문항구조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로 평가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같은 응답자의 동일 시점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므로 공통방법편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18문항을 대상으로 회전하지 않은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첫 번째 성분의 설명변량을 확인하였다. Harman의 단일성분 검정은 공통방법편의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 결과를 보조적인 진단자료로 활용하였다. 공통방법편의에 따른 해석상의 제약은 연구의 한계에서 논의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가설검증에는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는 성별, 학력 더미변수, 의회유형 및 역할갈등을 투입하였다. 2단계 모형에는 평균중심화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을 추가하고 3단계 모형에는 배치형태를 추가하였다. 4단계 모형에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배치형태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가설 H1은 2단계 모형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회귀계수와 설명력 증가분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가설 H2는 4단계 모형의 상호작용항과 배치형태별 회귀기울기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이분산에 강건한 HC3 표준오차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R^2 , ΔR^2 및 ΔF 는 위계적 OLS 모형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조절효과의 양상은 배치형태별 회귀기울기와 95% 신뢰구간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를 표본평균에 고정된 상태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평균과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거나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혁신적 AI 활용의 예측값을 산출하였다.

응답자가 18개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회 단위 군집표준오차와 의회 고정효과 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군집표준오차를 이용한 유의성 검정에는 18개 군집에 따른 자유도 17을 적용하였다. 다만 군집 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 결과는 보조적인 강건성 검정으로 해석하였다. 학력을 서열변수로 처리한 모형과 긍정문항 3개 또는 부정문항 3개를 사용한 모형을 추가로 추정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는 양측검정을 적용하였으며 횡단면 자기보고식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과를 변수 간 통계적 관계로 해석하였다.

2. 분석자료 및 측정문항

본 연구는 2026년 1월 경기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조사 표본은 156명이었으며 배치형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55명을 분석하였다. 최종 표본은 광역의회 1개와 기초의회 17개 등 총 18개 지방의회에 소속된 정책지원관으로 구성되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은 52명,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103명이다.¹⁾

1) 광역의회 응답자는 모두 경기도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의회유형의 계수는 경기도 내 조사대상 광역·기초의회 간 차이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혁신적 AI 활용 및 배치형태이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문항 변수는 문항별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인식이나 활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은 소속 지방의회가 정책이나 사업을 판단할 때 검증된 결과, 평가자료, 성과정보 및 학술연구 등의 증거를 중시한다고 정책지원관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Hall and Van Ryzin(2019)의 NERD(Norm of Evidence and Research in Decision-making) 척도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측정대상은 조직구성원이 지각한 소속 조직의 의사결정 규범이다. 문항 1~3은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문항 4~6은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부정 서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이 높도록 역채점하였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함께 사용한 척도에서는 응답과 요인구조가 문항의 서술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길곤·탁현우·강세진, 2015; 최수미·조영일, 2013; Zhang et al., 2016). 선행연구에서는 문항방향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점수를 구분하고 외부변수와의 관련성 또는 예측타당도를 비교하기도 하였다(Schmitt & Allik, 2005; Jiang et al., 2017). 본 연구는 NERD-6의 6문항 평균을 주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서술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긍정문항 3개의 평균과 역채점한 부정문항 3개의 평균을 각각 사용하여 동일한 조절모형을 추정하였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서로 다른 개념적 차원을 측정하는지는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혁신적 AI 활용은 정책지원관이 AI 도구의 새로운 활용방식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능 및 사용방법을 탐색·조정·실험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원조사의 AI 활용 관련 9문항 가운데 도구의 수정·조정, 새로운 활용방식에 대한 관심, 관련 정보의 탐색, 설정값의 실험적 적용 및 업무수행방식의 변화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Ahuja & Thatcher, 2005; Li et al., 2013; Wang et al., 2022, 2023). 본 연구에서 혁신성은 응답자 자신의 기존 AI 사용방식을 기준으로 이해하였으며 5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조사의 배치형태 문항은 ① 상임위원회 소속, ② 의원 1:1 전담 배치, ③ 의원 2:1 등 공동배치, ④ 사무처 부서 소속으로 구성되었다. 배치형태에 응답한 분석대상에서는 의원 2:1 등 공동배치와 사무처 부서 소속만 확인되었다. 이에 실제 응답에서 확인된 두 범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의원 공동배치를 0, 사무처 부서 소속을 1로 코딩하였다.

역할갈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충되는 요구, 비합리적인 압박 및 업무기준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Rizzo et al.(1970)에 근거한 7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하였다. 학력은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학사를 기준범주로 설정하고 석사와 박사수료 이상을 나타내는 두 개의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박사 응답자가 5명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박사수료 23명과 박사 5명을 ‘박사수료 이상’으로 통합하였다. 의회유형은 기초의회 0, 광역의회 1로 코딩하였다.

〈표 2〉 변수 구성 및 측정문항

구분	실제 측정문항	참고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우리 조직은 검증된 결과를 중시한다.	Hall & Van Ryzin (2019)
	우리 조직은 진행 중인 여러 사업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우리 조직은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증거기반 관점에서 접근한다.	
	우리 조직은 업무의 최종 성과 추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R)	
	사업 분석은 우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R)	
	우리 조직은 업무 수행 방향 설정에 있어 학술연구 결과를 크게 참고하지 않는다.(R)	
혁신적 AI 활용	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도구를 수정하거나 조정하여 활용한다.	Ahuja & Thatcher(2005); Li et al.(2013); Wang et al.(2022, 2023)
	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식을 고안하는 데 큰 흥미를 느낀다.	
	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업데이트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의 다양한 설정값을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데 익숙하다.	
역할 갈등	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제공하는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Rizzo et al. (1970)
	나는 상충되는 요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나는 더 나은 성과를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압박을 받는다.	
	나는 나의 합리적 판단에 반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잦다.	
	나는 이를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원이나 물자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을 부여받는다.	
	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이나 정책을 위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요청을 받는다.	
배치 형태 성별 학력 의회 유형	나는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귀하의 현재 배치형태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의회 유형	응답자가 소속된 지방의회의 유형	

주1: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혁신적 AI 활용 및 역할갈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R)은 부정서술문항으로 분석단계에서는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주2: 각 다문항 변수는 해당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배치형태는 의원 공동배치=0, 사무처 부서 소속=1로 코딩하였다. 성별은 남성=0, 여성=1, 의회유형은 기초의회=0, 광역의회=1로 코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분석대상은 총 155명으로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52명(33.5%)과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103명(66.5%)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성 71명(45.8%), 여성 84명(54.2%)이었으며 학력은 학사 52명(33.5%), 석사 75명(48.4%), 박사수로 23명(14.8%), 박사 5명(3.2%)이었다. 배치형태는 의원 공동배치 93명(60.0%), 사무처 부서 소속 62명(40.0%)이었다. 응답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의회 유형	광역의회	52	33.5	임용 전 경력	국회 보좌진	22	14.2
	기초의회	103	66.5		지방의회 관련 업무	30	19.4
성별	남성	71	45.8		공무원	65	41.9
	여성	84	54.2		시민단체·NGO	8	5.2
학력	학사	52	33.5		연구기관·학계	20	12.9
	석사	75	48.4		민간기업	10	6.5
	박사수료	23	14.8	배치 형태	의원 공동배치	93	60.0
	박사	5	3.2		사무처 부서 소속	62	40.0
전공	법학·행정학·정치학	61	39.4	계		155	100
	경제·경영·통계학	16	10.3				
	사회복지·교육학	21	13.5				
	도시공학·환경	27	17.4				
	인문·어학	4	2.6				
	기타	26	16.8				

2. 주성분분석 및 신뢰도 분석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6문항, 혁신적 AI 활용 5문항 및 역할갈등 7문항 등 총 18문항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KMO는 .813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53) = 2,027.937, p < .001$). 초기 고유값이 1 이상인 4개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초기 고유값은 각각 6.163, 3.714, 2.091 및 1.351이었다. 회전 전 네 성분의 설명변량은 각각 34.239%, 20.635%, 11.615% 및 7.505%였으며 누적 설명변량은 73.994%였다.

역할갈등 문항은 .654~.853, 혁신적 AI 활용 문항은 .786~.888의 적재량을 나타내며 각각 하나의 성분으로 구분되었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문항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서로 다른 성분으로 분리되었다. 긍정문항의 적재량은 .710~.952였으며 역채점한 부정문항의 적재

량은 .782~.925였다. 다른 성분에 대한 적재량의 절댓값은 모두 .300 미만이었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서로 다른 성분으로 구분된 결과에는 문항의 서술방향과 내용의 차이가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척도의 차원성과 문항방향에 따른 방법효과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NERD-6의 원칙도 구성을 고려하여 6문항 평균을 주분석에 사용하고 긍정문항과 역채점한 부정문항을 각각 사용한 모형을 추가로 추정하였다.

신뢰도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6문항 $\alpha = .743$, 긍정문항 3개 $\alpha = .772$, 부정문항 3개 $\alpha = .821$, 혁신적 AI 활용 5문항 $\alpha = .903$, 역할갈등 7문항 $\alpha = .928$ 로 나타났다.

회전하지 않은 주성분분석에서 첫 번째 성분의 설명변량은 34.239%였다. 이 결과는 공통방법 편의에 관한 보조적 진단자료로 활용하였다. 공통방법편의의 영향을 판단할 때에는 동일 시점에 수집한 자기보고식 자료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 주성분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성분적재량	초기 고유값	회전 전 설명변량(%)	회전 전 누적설명 변량(%)	신뢰 계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EBDM_6R	.925	2.091	11.615	66.489	.821
	EBDM_5R	.852				
	EBDM_4R	.782				
	EBDM_1	.952	1.351	7.505	73.994	.772
	EBDM_3	.729				
	EBDM_2	.710				
혁신적 AI 활용	IAIU_5	.888	3.714	20.635	54.874	.903
	IAIU_4	.875				
	IAIU_9	.844				
	IAIU_6	.822				
	IAIU_8	.786				
역할갈등	RC_1	.853	6.163	34.239	34.239	.928
	RC_2	.852				
	RC_3	.849				
	RC_7	.841				
	RC_5	.733				
	RC_6	.709				
	RC_4	.654				

주1: N = 155. EBDM_4, EBDM_5 및 EBDM_6은 역채점하였으며 R은 역채점 문항을 의미한다.

주2: 전체 18개 문항에 주성분 추출과 Direct Oblimin 회전($\delta = 0$, Kaiser 정규화)을 적용하였으며 성분 수는 사전에 고정하지 않았다. 절댓값 .40 미만의 적재량은 생략하였다.

주3: EBDM_4R~EBDM_6R은 부정문항이며 EBDM_1~EBDM_3은 긍정문항이다. 신뢰계수는 각 문항군의 Cronbach's α 를 제시하였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전체 6문항의 Cronbach's α 는 .743이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구분은 문항의 서술방향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4: 누적설명변량은 초기 고유값이 큰 순서인 역할갈등, 혁신적 AI 활용,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부정문항, 긍정문항 순서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계수는 <표 5>와 같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평균은 2.827(SD = .599), 혁신적 AI 활용의 평균은 3.334(SD = .857), 역할갈등의 평균은 3.300(SD = .923)이었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의 단순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 = .006$).

<표 5> Pearson 상관관계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2.827	.599	1							
2	3.334	.857	.006	1						
3	.400	.491	.134	-.045	1					
4	3.300	.923	-.485***	.199*	-.125	1				
5	.542	.500	.073	-.086	-.095	-.002	1			
6	.484	.501	-.051	.038	.105	.156	.087	1		
7	.181	.386	.005	-.007	-.041	-.116	-.006	-.455***	1	
8	.335	.474	.172*	.208**	-.022	-.270***	-.005	-.004	.057	1

주: 1=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2=혁신적 AI 활용; 3=배치형태; 4=역할갈등; 5=성별; 6=학력(석사); 7=학력(박사수료 이상); 8=의회유형

* $p < .05$, ** $p < .01$, *** $p < .001$

4. 혁신적 AI 활용에 대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혁신적 AI 활용 변량의 12.1%를 설명하였다($R^2 = .121$, 수정 $R^2 = .091$, $F = 4.098$, $p = .002$).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을 추가한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13.4%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추가에 따른 설명력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Delta R^2 = .013$, $\Delta F = 2.179$, $p = .142$),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회귀계수도 유의하지 않았다($B = .186$, $p = .226$). 따라서 배치형태를 투입하기 전인 2단계 모형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설 H1은 지지되지 않았다. 배치형태를 추가한 3단계 모형에서 배치형태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043$, $p = .761$). 이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통제변수를 고려한 3단계 모형에서 배치형태에 따른 혁신적 AI 활용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4단계 모형은 혁신적 AI 활용 변량의 18.0%를 설명하였다($R^2 = .180$, 수정 $R^2 = .136$, $F = 4.019$, $p < .001$).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설명력은 13.4%에서 18.0%로 4.6%p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 = .046$, $\Delta F = 8.239$, $p = .005$).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배치형태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부(-)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다($B = -.643$, HC3 SE = .267, $p = .017$, 95% CI [-1.171, -.116]). 배치형태를 의원 공동배치 = 0, 사무처 부서 소속 = 1로 코딩하였으므로 사무처 부서 소속의 회귀기울기가 의원 공동배치보다 .643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모형의 Durbin-Watson 값은 1.939였으며 VIF는 1.034~2.046으로 나타났다.

〈표 6〉 혁신적 AI 활용에 대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제 변수	성별	-.145	-.162	-.166	-.188
	학력(학사-기준범주)	-			
	학력(석사)	.017	.019	.025	.030
	학력(박사수로 이상)	.029	.045	.046	-.043
	의회유형	.509***	.498***	.495***	.476**
	역할갈등	.255***	.313***	.311***	.287***
주효과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인식		.186	.190	.449*
	배치형태			-.043	-.034
조절 효과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인식×배치형태				-.643*
R^2 (Adjusted R^2)		.121(.091)	.134(.099)	.134(.093)	.180(.136)
F		4.098**	3.805**	3.256**	4.019***
$\Delta R^2/\Delta F$		—	.013/2.179	<.001/.099	.046/8.239***
Durbin-Watson					1.939

주1: 분석대상은 155명이며 표의 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다. 1단계에는 통제변수, 2단계에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3단계에는 배치형태, 4단계에는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은 평균중심화하였다.

주2: 배치형태는 의원 공동배치=0, 사무처 부서 소속=1로 코딩하였다. 성별은 남성=0, 여성=1이며 의회유형은 기초의회=0, 광역의회=1이다. 학력은 학사를 기준범주로 설정하고 석사와 박사수로 이상의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주3: 회귀계수의 유의확률에는 HC3 강건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R^2 , F, ΔR^2 및 ΔF 는 일반적인 OLS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VIF는 1.034~2.04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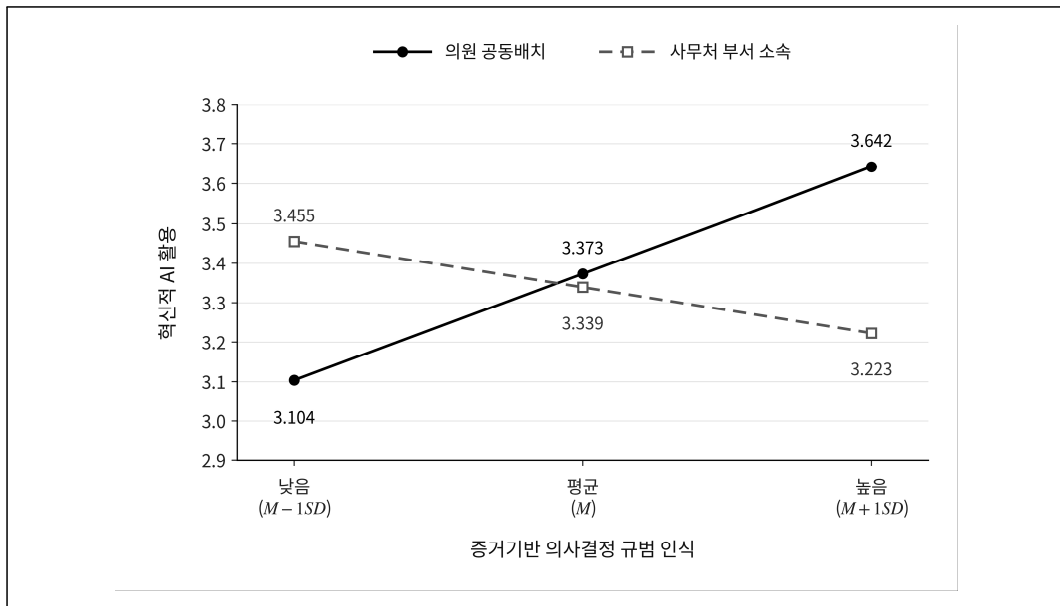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의원 공동배치에서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이 높을수록 혁신적 AI 활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B = .449$, $p = .011$). 사무처 부서 소속에서는 두 변수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194$, $p = .365$). 두 집단의 회귀기울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643$, $p = .017$).

〈표 7〉 배치형태별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조건부 효과

배치형태	조건부 기울기 B	HC3 SE	t	p	95% CI
의원 공동배치	.449	.174	2.584	.011	[.106, .792]
사무처 부서 소속	-.194	.214	-.908	.365	[-.617, .228]
집단 간 기울기 차이	-.643	.267	-2.410	.017	[-1.171, -.116]

〈그림 2〉 배치형태에 따른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의 관계



주: 낮음과 높음은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평균에서 각각 1표준편차 낮은 값과 높은 값을 의미한다. 해당 값은 낮음 2.228, 평균 2.827, 높음 3.426이다. 세로축은 통제변수를 표본평균에 고정하여 산출한 혁신적 AI 활용의 예측값이다.

5. 문항방향별 민감도 및 강건성 검정

전체 측정문항을 대상으로 한 주성분분석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서로 다른 성분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문항의 서술방향에 따라 회귀분석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긍정문항 3개를 사용한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은 주분석과 같은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395$, $SE = .200$, $p = .051$, 95% CI $[-.791, .001]$). 부정문항 3개를 역채점하여 사용한 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다($B = -.409$, $SE = .195$, $p = .038$, 95% CI $[-.795, -.023]$). 두 모형에서 계수의 방향과 크기는 유사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배치형태별 조건부 기울기도 사용한 문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긍정문항을 사용한 모형에서는 의원 공동배치의 기울기가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냈고($B = .473$, $p = .001$) 사무처 부서 소속의 기울기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77$, $p = .635$). 부정문항을 사용한 모형에서는 의원 공동배치의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았으며($B = .154$, $p = .274$), 사무처 부서 소속의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냈으나 유의확률은 판정기준에 근접하였다($B = -.255$, $p = .0498$). 즉, 두 모형 모두 의원 공동배치의 기울기가 사무처 부서 소속보다 크게 추정되었으나 배치형태별 조건부 기울기의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의회 단위 군집표준오차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였다($B = -.643$, $p = .006$). 의회 고정효과와 HC3 표준오차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냈다($B = -.655$, $p = .040$). 학력을 서열변수로 처리한 모형에서도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냈다($B = -.629$, $p = .015$). 의회 단위 군집표준오차를 적용한 결과는 의회 수가 18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적인 검정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8〉 강건성 검정 및 문항구성별 분석 결과

구분	상호작용 B	SE	p	95% CI
기본모형	-.643	.267	.017	$[-1.171, -.116]$
의회 단위 군집표준오차 적용	-.643	.207	.006	$[-1.079, -.207]$
의회 고정효과 포함	-.655	.315	.040	$[-1.278, -.031]$
학력의 코딩 방식 변경	-.629	.256	.015	$[-1.136, -.123]$
긍정문항 3개 사용	-.395	.200	.051	$[-.791, .001]$
부정문항 3개 사용(역채점)	-.409	.195	.038	$[-.795, -.023]$

주1: B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배치형태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다.

주2: 기본모형은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 6문항의 평균값과 학력 터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의회 단위 군집표준오차 적용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에는 HC3 강건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주3: 의회 단위 군집 수는 18개이며 유의성 검정에는 자유도 17을 적용하였다. 의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의회유형이 고정효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투입하지 않았다.

주4: 학력의 코딩 방식 변경 모형은 학사=1, 석사=2, 박사수료=3, 박사=4로 처리하였다. 긍정문항 및 부정문항 모형은 각각 3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는 양측검정을 적용하였다.

6. 가설검증

가설 H1은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정(+)의 관계를 예상하였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 두 변수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B = .186$, $p = .226$) 설명력 증가분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1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H2는 두 변수 간 정(+)의 관계가 사무처 부서 소속에 비해 의원 공동배치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냈으며($B = -.643$, $p = .017$), 의원 공동배치의 조건부 기울기가 사무처 부서 소속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2단계 모형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4단계 모형에서는 두 변수 간 회귀기울기가 배치형태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이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관계와 배치형태별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가설검증

연구 가설	결과
H1. 정책지원관이 지각한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은 혁신적 AI 활용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H2.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정(+)의 관계는 사무처 부서 소속에 비해 의원 공동배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됨

주: 가설 H1은 2단계 모형의 독립변수 회귀계수와 설명력 증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가설 H2는 4단계 모형의 상호작용항과 배치형태별 조건부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를 분석하고 배치형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

첫째, 배치형태를 투입하기 전 모형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설 H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AI친화적 조직문화와 공무원의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험 간 정(+)의 관계를 확인한 홍상우(2026a)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다만 해당 연구는 AI 활용에 대한 조직의 기대와 지원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의사결정에서 증거를 증시하는 규범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지방의회에서는 증거 활용에 관한 업무기준과 AI 활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여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례안 검토나 예산자료 분석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과업과 검토항목을 정하고 해당 업무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습에는 조례 원문과 시행일, 예산의 기준연도와 금액 단위, 인용자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사항을 공통 검토양식에 기록하도록 하여 증거자료의 검증 기준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치형태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의원 공동 배치에서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사무처 부서 소속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혁신적 AI 활용과 선행요인 간 관계가 업무 및 기술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Zhang et al.(2026)의 논의와 부합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와 실제 업무배분 방식에 적합한 AI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원 공동배치에서는 여러 의원의 요청 목적, 자료 범위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고 일정이 충돌할 때 적용할 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관이 과업에 적합한 AI 활용방법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작성한 자료의 출처와 사실관계는 동료 정책지원관이 상호검토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인 3단계 모형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두 배치집단의 혁신적 AI 활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4단계 모형에서 확인한 조절효과는 배치형태에 따라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회귀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진우·박상우(2024)도 의원의 직접 지시와 전문위원을 통한 업무별 배분방식에 각각 장단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운영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면 사무처 부서 소속에서도 기존 업무분장과 검토체계를 활용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개 회의록의 쟁점 정리나 유사 조례 비교를 부서의 시범과업으로 선정하고 자료 작성자와 검토자의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담당 정책지원관은 AI 산출물을 원자료와 대조하고 관리자는 검토의견의 타당성과 자료 제공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두 배치형태 모두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수정사례를 공유하고 자료 작성·검토시간, 출처 확인 여부 및 재작성 정도를 점검하여 교육과 업무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AI 도구의 새로운 활용방식에 대한 관심과 탐색·조정·실험 및 업무 적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정책지원관이 인식한 소속 의회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배치집단 간 혁신적 AI 활용 수준의 차이와 배치형태의 조절효과를 구분하여 두 변수 간 관계가 배치형태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한 시점에 수집한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석결과는 변수 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 AI 활용 수준이 높은 정책지원관이 소속 의회의 증거중시 규범을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동일한 응답자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방법편의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에 따른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Harman의 단일성분검정에서 첫 번째 성분의 설명변량은 34.239%로 나타났으나 공통방법편의의 영향을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시점을 구분하고 AI 이용기록, 작성문서, 객관적 조직지표 및 관리자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대상은 경기도 내 18개 지방의회에 소속된 정책지원관 155명으로 한정되었다. 의회 단위 군집표준오차와 의회 고정효과를 적용하였으나 분석에 포함된 의회 수가 적다는 점에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의회 응답자 52명은 모두 경기도의회 소속이므로 의회유형별 차이는 조사대상 의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 지역과 의회 수를 확대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측정문항을 대상으로 한 주성분분석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의 긍정 문항과 부정문항이 서로 다른 성분으로 분리되었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각각 사용한 두 모형에서는 상호작용계수의 방향과 크기가 유사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과 배치형태별 조건부 기울기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는 문항내용과 서술방향의 영향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구성하거나 부정 표현을 제거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도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로 수집한 자료에

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하려는 개념의 차원성과 문항 서술방향에 따른 방법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적 AI 활용은 원조사의 AI 관련 문항 가운데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새로운 활용방식에 대한 관심과 자기보고식 활용행동을 포함하므로 AI 산출물의 정확성과 객관적인 업무성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치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업무재량, 과업다양성, 의원의 요구를 직접 파악하는 정도, 관리자 검토 및 부서규범을 추가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배치형태에 따라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증거기반 의사결정 규범 인식과 혁신적 AI 활용 간 관계가 배치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지원관의 AI 활용을 이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소속 의회의 증거중시 규범에 대한 인식과 배치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고길곤·탁현우·강세진. (2015).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3): 515-539.
- 김경일·김정도. (2025). 의정활동 성과를 통해 본 정책지원관 도입의 제도적 효과: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3(1): 101-126.
- 김영준. (2026).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분석: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6(1): 57-86.
- 김용석·김태영.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분석: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 만족도 비교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20(3): 1-26.
- 김주영·최경현. (2024). 생성형 AI와 조직 문화가 재무 및 비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학회지』, 27(2): 175-198.
- 노상규·오연재. (2025).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생성형 AI 업무도입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융합기술연구』, 5(4): 263-275.
- 류준호. (2017).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제도와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19-560.
- 문원식. (2014). 지방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14(2): 1-21.
- 박순애·이혜연. (2025).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인식과 활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63(4): 33-65.
- 박순종. (2021).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과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2): 119-145.
- 박순종·강상원·이승모. (2025). 지방의회 전문성과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정책지원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7(2): 123-150.
- 박순종·박노수. (2014).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도의 차등적 도입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7(3): 61-89.
- 박진우·박상우. (2024). 「정책지원관제도 운영 사례 연구」. SRI-현안-2024-15. 수원시정연구원.
- 손경희.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5(3): 41-64.
- 송현호·김경화·김민한.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역할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델파이 조사와 계층화 분석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7(3): 109-134.
- 안성현·이선은·이치현. (2025). 정책지원관의 역할 명확성을 위한 업무 중요도 분석: 계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자치행정학보』, 39(1): 23-45.

- 유병선.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기본연구 2023-06. 대전세종연구원.
- 윤정우·하병규. (2024).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35-56.
- 이병현.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관리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37(2): 43-62.
- 이원재. (2026).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의회 제6~9대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40(2): 121-150.
- 이재란·신연수. (2025).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112: 215-252.
- 전영옥. (2024).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6(2): 91-112.
- 전지수. (2023).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입법적 과제. 「입법학연구」, 20(2): 89-115.
- 정혜진. (2025). 공무원의 생성형 AI 이용 의도에 관한 요인 분석: 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2(1): 133-164.
- 주희진.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쟁점과 개선방안」. 지방의정브리프 제2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희진·고경훈·정기용. (2023).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기본연구 2023-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수미·조영일. (2013). 부정문항이 포함된 척도의 요인구조 및 방법효과 검증과 남녀 간의 차이 비교: Rosenberg 자기존중감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71-589.
- 최혜민·안용진. (2025). 공무원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용 인식과 태도에 대한 분석: 기술 도입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7(3): 473-503.
- 행정안전부. (2024).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개정판)」.
- 홍상우·김동욱·이대웅. (20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4): 99-130.
- 홍상우·김동욱·이대웅. (2025). 정책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7(1): 237-265.
- 홍상우·오현규.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8): 407-426.
- 홍상우. (2026a). 공직사회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험에 관한 실증연구: 혁신실행이론의 관점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6(2): 39-64.

- 홍상우. (2026b). 공직사회에서 AI일자리대체 인식의 역할: AI친화적 조직풍토와 생성형 AI 업무 활용 경험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5(2): 127-153.
- Ahuja, M. K., & Thatcher, J. B. (2005). Moving beyond intentions and toward the theory of trying: Effects of work environment and gender on post-adoption information technology use. *MIS Quarterly*, 29(3): 427-459.
-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 Hall, J. L., & Van Ryzin, G. G. (2019). A norm of evidence and research in decision-making (NERD): Scale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9(3): 321-329.
- Head, B. W. (2016). Toward more “evidence-informed” policy 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6(3): 472-484.
- Janssen, O. (2000). Job demands, perceptions of effort-reward fairness and innovative work behaviour.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3(3): 287-302.
- Jennings, E. T., Jr., & Hall, J. L. (2012). Evidence-based practice and the use of information in state agency decision making.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2): 245-266.
- Jiang, J. M., Seng, E. K., Zimmerman, M. E., Sliwinski, M., Kim, M., & Lipton, R. B. (2017). 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subscales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in older adults.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59(3): 987-996.
- Koo, C., Chung, N., & Kim, H. W. (2015). Examining explorative and exploitative uses of smartphones: A user competence perspective.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8(1): 133-162.
- Li, X., Hsieh, J. J. P.-A., & Rai, A. (2013). Motivational differences across post-acceptance information system usage behaviors: An investigation in the business intelligence systems contex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4(3): 659-682.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Rizzo, J. R., House, R. J., & Lirtzman, S. I.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2): 150-163.

- Salancik, G. R., & Pfeffer, J. (1978).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job attitudes and task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3(2): 224-253.
- Schmitt, D. P., & Allik, J. (2005).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53 nations: Exploring the universal and culture-specific fea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623-642.
- Sun, H. (2012). Understanding user revisions when using information system features: Adaptive system use and triggers. *MIS Quarterly*, 36(2): 453-478.
- Tushman, M. L., & Nadler, D. A. (1978). Information processing as an integrating concept in organizational desig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 613-624.
- Wang, X., Lin, X., & Shao, B. (2022). How does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 business agility? Evidence from chatbo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66: 102535.
- Wang, X., Lin, X., & Shao, B.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s the way we work: A close look at innovating with chatbo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4(3): 339-353.
- Wirtz, B. W., Weyerer, J. C., & Geyer, C.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ublic sector—Application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2(7): 596-615.
- Zhang, X., Noor, R., & Savalei, V. (2016). Examining the effect of reverse worded items on the factor structure of the Need for Cognition Scale. *PLOS ONE*, 11(6): e0157795.
- Zhang, Y., Chen, X., & Wei, S. (2026). How does AI knowledge empowerment influence innovative use of AI? The moderating roles of work and AI technological uncertainties.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39(5): 2129-2158.
- Zuiderwijk, A., Chen, Y.-C., & Salem, F. (2021). Implication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ublic governanc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a research agenda.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8(3): 101577.

-
- 홍 상 우:**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 비서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및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객원교수,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공공인적자원관리, 지방자치, 청년정책, 이민행정, AI행정 등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공직사회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험에 관한 실증연구”(2026), “약성민원 유형과 공직이탈”(2026),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2026) 등이 있다(hong657@sungkyul.ac.kr).
- 김 성 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규제, 관료제, 대통령제, 지방의회이고, 최근 논문으로는 “대표관료제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론을 중심으로”(2023),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2023) 등이 있다(sunggeunkim1986@gmail.com).
- 김 민 한:**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거버넌스, 비교행정학, 공공부문 혁신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정부정당성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6) 등이 있다(minhankim@kmou.ac.kr).